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번호				3			제 [ ] 선택
----	--	------	--	--	--	---	--	--	----------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정치는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이며 국가 권력에 의한 사회적 가치의 배분 과정입니다.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의원의 의정 활동, (가) 을/를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자리 배치를 위한 학급 회의, 아파트 나눔 장터 운영을 위한 입주자 대표 회의도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② 을의 관점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정치로 본다.
-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국무 회의의 의사 결정 과정을 정치로 본다.
- ⑤ (가)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부의 정책 추진'이 들어갈 수 없다.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아래 그림은 각 질문에 대해 '예', '아니요' 중 같은 답을 할 수 있는 기본권 유형끼리 점선으로 묶은 것이다.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소극적·방어적 권리인가?

A C

B

(가)

A C

B

(나)

A C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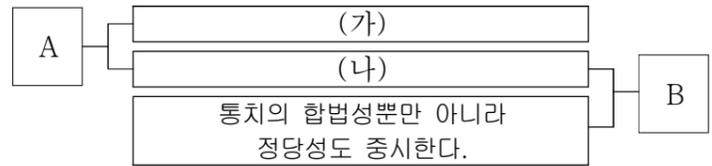
- ① C는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하더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는 권리이다.
- ② A가 사회권이면, (가)에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B가 청구권이면, (나)에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가)에 '기본권 침해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가 들어가면, 교육을 받을 권리는 A에 해당한다.
- ⑤ (나)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인가?'가 들어가면, 공무 부담권은 B에 해당한다.

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우리나라의 정부, 법원, 헌법 재판소 중 하나임.) [3점]

- A는 국무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가) 을/를 B에 청구하였다.
- 재판 당사자인 갑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C에 (나)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래서 갑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다) 을/를 B에 청구하였다.

- ① A는 (가)를 청구하여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 ② B는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을 가진다.
- ③ C는 재판 당사자의 제청 신청 없이는 (나)를 제청할 수 없다.
- ④ B의 재판관 중 3인은 C의 장(長)이 임명한다.
- ⑤ (다)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4. 그림은 법치주의의 유형 A, B의 특징을 연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A는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ㄴ. B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ㄷ. (가)에는 '국가 권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가 들어갈 수 있다.
- ㄹ. (나)에는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생: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는 땅을 2m 넘는 깊이로 팔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땅 주인이 건물을 지을 때 지하 주차장 건설이 제한된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요?

교사: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었던 A가 B로 수정·보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개인의 소유권은 법에 따라 보장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A는 개인의 소유권을 상대적 권리로 간주한다.
- ② B는 소유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A는 B와 달리 재산 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에 적용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대의 사법(私法) 관계에 적용된다.
- ⑤ B는 A와 달리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다.

6. (가)~(라)는 정치 과정의 사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 시민 단체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인하여 먹을 수 있는 제품을 폐기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나) 국회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다) 식품 회사들로 구성된 ○○ 협회는 유통기한이 적힌 포장재 폐기 등에 따른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였다.  
 (라)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 이후부터 단속하기로 하였다.

- ① 정치 과정에서 (가)는 환류, (다)는 산출에 해당한다.
- ② (나)는 (다)와 달리 정책 결정 기구의 활동에 해당한다.
- ③ (다)는 (가)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 ④ (라)는 (가)와 달리 정치 참여 주체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⑤ (나)와 (라)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A 기업의 운영 실태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고 이에 A 기업은 명예훼손죄로 갑을 고소하였다. ㉠ 기소된 갑은 제보자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 공판에서 재판부는 "갑은 인터뷰 과정에서 제보자의 말이 허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콘텐츠에서 반복적으로 노출하였다. 인터넷의 파급력 및 영상 조회 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A 기업의 피해가 중하다."라며 갑에게 ㉢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갑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다.

<보 기>  
 ㉠. ㉠은 갑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판사가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 ㉡이 개시된 때부터 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 재판부는 갑에게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을 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8. 국제법의 법원(法源)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임.)

○ A는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 중에 국내법으로 수용된 것이다.  
 ○ B는 A, C와 달리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한 명시적인 합의에 해당한다.

- ① A는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포함한다.
- ②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B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③ A는 B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 ④ B는 C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 ⑤ C는 B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은 회사 내 부서 이동으로 인해 노동조합원으로서 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갑의 구제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한 갑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 노동 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갑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였다.  
 ○ 을은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을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을의 구제 신청은 인용되었다.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사용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 노동 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보 기>  
 ㉠.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갑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 을은 ○○ 지방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과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은 다르다.  
 ㉣. 갑의 사용자와 을의 사용자 모두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t 시기와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t+2 시기의 정부 형태와 다르다. t 시기의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A당, t+1 시기와 t+2 시기의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D당이다. <자료 1>은 각 시기별 갑국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별 득표율, <자료 2>는 각 시기별 갑국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단, 각 시기 내의 정당별 의회 의석수,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다.

구분	정당별 득표율(%)			
	A당	B당	C당	D당
t 시기	52	25	14	9
t+1 시기	26	20	12	42
t+2 시기	8	31	10	51

구분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차이(%)			
	A당	B당	C당	D당
t 시기	8	-5	-5	2
t+1 시기	2	2	5	-9
t+2 시기	6	-20	3	11

\* 득표율과 의석률 차이는 '득표율-의석률'로 계산하며, %는 두 백분율 간의 산술적 차이를 의미함.

- ① t 시기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은 동일인이다.
- ② t+2 시기에 의회 다수당의 내각 불신임 결의로 국정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 ③ t 시기는 t+2 시기와 달리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 ④ t+1 시기는 t+2 시기와 달리 여소야대 정국이 나타난다.
- ⑤ t 시기와 t+1 시기 모두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1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교사 자신이 선택한 정치 참여 집단의 특성을 다른 정치 참여 집단과 비교하여 발표해 볼까요?

A는 B와 달리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합니다.

B는 C와 달리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합니다.

C는 A와 달리 \_\_\_\_\_ (가)

교사 세 학생이 발표한 내용 모두 옳습니다.

— <보 기> —

ㄱ. A는 정치적 중립을 본질적 특성으로 지닌다.  
 ㄴ. C는 정부에 대한 비판 및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ㄷ. B, C는 A와 달리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가)에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남)과 을(여)은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 신고만 하고 살던 중, 그 사이에서 A가 태어났다. 그 후 갑과 을은 잦은 다툼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을 하였고 A는 을이 양육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병과 정은 법률상 혼인을 하고 그 사이에서 B가 태어났다. 병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병과 정은 조정 기간을 거쳐 이혼을 하였고 B에 대한 양육권은 정이 갖기로 하였다. 한편 갑과 정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 갑은 B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2년 후 갑과 정 사이에서 C가 태어났다.  
 \*갑~정의 성(姓)과 본(本)은 모두 다름.

- ① 갑은 인지 과정을 통해 A와의 친자 관계를 형성한다.  
 ② 병과 정은 이혼은 갑과 을의 이혼과 달리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병이 정과의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병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B는 C와 달리 갑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다.  
 ⑤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정, A, B, C 모두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13. (가)~(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7세)은 부모(법정 감독 의무자)의 눈을 피해 주차장에서 장난을 치다가 이웃집 A(34세)의 차량 외관을 훼손하였다.  
 (나) 을(45세)이 운영하는 세탁소 직원 병(29세)은 손님 B가 을에게 맡긴 의류를 세탁하던 중 실수로 B의 의류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  
 (다) 정(33세)은 무(56세) 소유의 건물을 점유 및 관리하던 중 출입문에 설치상의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입문의 유리가 깨지면서 지나가던 C가 다쳤다.

- ① (가)에서 갑의 부모는 갑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더라도 A에 대하여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② (나)에서 을의 B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나)에서 을의 B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병의 B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④ (다)에서 정과 무는 C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⑤ (다)에서 정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생활 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리던 ㉠갑은 은행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다. 당시 옆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을은 갑을 밀어 넘어뜨리고 라이터를 빼앗았다. 법원은 갑이 방화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을이 갑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A가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병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정에게 주먹질을 하고 자신의 집 창고에 정을 감금하였다.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던 ㉣정은 창고에 있던 물건에 불을 붙였다. 법원은 병이 정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정이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정의 방화 행위에 대해서는 B가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① A는 책임, B는 위법성이다.  
 ② ㉠은 ㉡과 달리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다.  
 ③ ㉢은 ㉣과 달리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④ ㉢은 ㉣과 달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보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⑤ ㉣은 ㉤과 달리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15. 밑줄 친 ‘A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헌법 재판소 판례 소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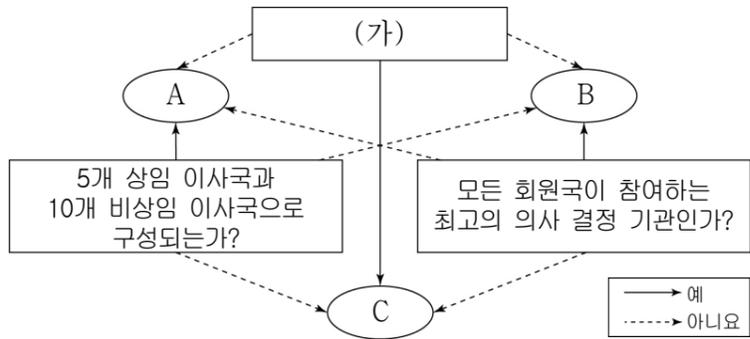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면 경범죄로 처벌?

<청구인의 주장>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못된 장난 등’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로 인해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 일반 국민은 어떤 내용이 심판 대상 조항에 해당되는지 예측할 수 없어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A 원칙에 반한다.

<헌법 재판소 결정>  
 심판 대상 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타인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해당 법률에는 본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법 집행 기관이 심판 대상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보아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A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①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범죄의 성립 및 처벌의 정도를 법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범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형벌의 정도는 서로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⑤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16. 그림은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중 하나임.) [3점]



- ① A의 표결 방식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 ② C는 국가와 국가 간 분쟁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도 다룬다.
- ③ A의 의결은 B의 의결과 달리 회원국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 ④ B는 A와 달리 C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⑤ (가)에는 '평화 유지군 파견을 결의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8세)은 무선 헤드폰을 사기 위해 전자 제품 매장을 방문했다. 갑은 전시된 제품 중 고가의 최신형 무선 헤드폰을 구매하는 계약을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40세)과 체결했다. 병은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 일주일 후, 갑은 자신의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정(16세)에게 판매했다. 정은 자신의 용돈으로 음료 교환권을 구매하였고, 정의 법정 대리인 무는 이 사실을 몰랐다.

- ① 갑과 병의 계약은 체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야 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병은 을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병이 계약 체결 다음 날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정이 무의 동의 없이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구매하였으므로 무는 정과 갑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8.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획득과 같은 참정권의 확대는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A의 실현에 기여한다.  
○ 정부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확충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B의 실현에 기여한다.

- ① A는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② B에 따라 국가는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 방향을 제시한다.
- ④ B는 A와 달리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⑤ A와 B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과 집행 기관 중 하나임.)

지방 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A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B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A는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② A와 B는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 ③ B는 A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가진다.
- ④ B의 의원은 A와 달리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B는 지방 행정 사무에 관한 감사 및 조사권으로 A를 견제할 수 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 150명, 비례 대표 의원 30명으로 구성되며,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에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고, 비례 대표 의원은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数)만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갑국은 현행 의원 정수(定數)와 유권자 투표 방식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거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의회 전체 의석을 배분함.
- 권역별로 각 정당별 득표율에 권역별 전체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数)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함.
- 권역별로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해당 권역의 지역구 의석수를 빼서 나온 의석수를 해당 권역의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분함. 단, 지역구 의석수가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경우, 초과 의석은 인정하나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음.

표는 최근 의회 선거 결과와 이를 개편안의 권역 구분에 적용한 것이다.

구분		현행	개편안		
		전체	1권역	2권역	3권역
유권자 수(만 명)		900	300	400	200
A당	지역구 의석수(석)	50	19	24	7
	정당 득표율(%)	36	40	40	22
B당	지역구 의석수(석)	25	8	5	12
	정당 득표율(%)	20	20	15	30
C당	지역구 의석수(석)	50	19	25	6
	정당 득표율(%)	30	30	35	20
D당	지역구 의석수(석)	25	6	8	11
	정당 득표율(%)	14	10	10	28

\* 정당은 A~D당만 존재하고, 투표율은 100%, 무효표는 없음.  
\*\* 현행 및 개편안 검토 시 위 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 ① 현행에서 A당의 총의석수는 B당의 2배이다.
- ② 현행에서 C당의 지역구 의원 의석수와 비례 대표 의원 의석수는 같다.
- ③ 개편안 적용시 B당이 각 권역에서 배분받은 의석수는 모두 같다.
- ④ 개편안 적용시 D당이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권역은 2개이다.
- ⑤ 현행과 개편안의 총의석수는 같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